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 | 제28호 (2026년 9월 9일)
IPUS HORIZON | No. 28 (Sept. 9, 2026)

미-이란 전쟁, 이란의 존재론적 안보와 미국의 오판

한새롬(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들어가며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이란이 이 정도로 끈질기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초반 이란 핵시설, 군사기지, 지휘통제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고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란이 방어적 태세로 전환하고 트럼프의 예상처럼 전쟁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미국과 이란의 압도적인 군사적 격차, 이란이 장기간 겪은 경제제재, 지도부 공백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전망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란은 예상과 다른 선택을 했다.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같은 전략 거점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면서 이 전쟁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의 충돌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보 위기로 전환시켰다. 나아가 과거 많은 전문가가 우려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을 위협했다. 세계 원유의 상당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자 국제 에너지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원유·가스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 우려가 확산되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이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는 선택이었다. 주변 국가들의 반발과 추가 제재 및 미국의 대규모 보복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란은 왜 이처럼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경 대응을 선택했을까?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이란 내 정치 엘리트 간 균열과 권력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상황에서 이 질문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나아가 전쟁 이후에도 이란 체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를 가늠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이란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택한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란 권력구조와 체제의 향방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란 권력구조의 이중성과 통제된 경쟁

이란 정치체제는 흔히 신정체제로 분류된다. 국가 주권이 국민이 아니라 이슬람 법학자의 통치(Velayat-e Faqih)원리에 기반한 최고지도자에게 귀속된다는 이해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란 체제를 독재체제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는 권력구조의 이중성에 있다. 최고지도자, 헌법수호위원회, 사법부, 혁명수비대(IRGC)를 포함한 군·안보기구는 비선출 권력에 속한다. 반면 대통령과 의회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엘리트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다만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후보 자체가 최고지도자와 헌법수호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인물들로 한정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체제 전복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은 대체로 배제되기에 경쟁은 허용되지만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의 경쟁은 차단된다.

따라서 이란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은 '통제된 경쟁'이다. 하지만 통제된 경쟁이 무의미한 경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란-이라크 전쟁과 이후 혁명 체제의 공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란 내부에 파벌정치가 형성되었다. 오늘날 흔히 강경파 또는 원칙주의파로 불리는 진영은 미국과의 협상 거부, 자립경제, 문화적 보수주의와 같은 가치를 강조해왔다.

이들의 주요 기반은 종교 권위를 중시하는 전통 보수 성직자 네트워크,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혁명수비대, 혁명 이념을 사회 전반에 재생산하는 바시지(Basij), 강경파 내부에서도 가장 이념적으로 경직된 페이다리 전선 등이다.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는 이러한 강경파 노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대통령이었다. 반면 개혁파와 실용주의 세력의 뿌리는 아크바르 하셰미 라프산자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라프산자니는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이란식 시장경제 도입, 해외 투자 유치, 외교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후 모하마드 하타미를 비롯한 개혁파 대통령들은 법치 강화, 언론 자유 확대, 시민사회 활성화, 대외관계 완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학생, 중산층, 도시 전문직, 여성 유권자들이 전통적으로 이들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다.

이 두 진영의 관계를 둘러싼 해석은 다양하다. 하지만 국가 정체성의 일관성과 안정성에 주목하는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경쟁은 이슬람공화국 체제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투쟁이라기 보다 1979년 혁명 이후 형성된 국가 정체성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에 가깝다.

이란정부의 국가정체성

이란 국가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두 키워드는 '이슬람 혁명'과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 이전 팔레비 왕조의 이란은 세속주의, 페르시아 민족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친서구적 근대화를 중심으로 국가 정체성을 구축했다. 당시 이란은 서구 질서 속에서 인정받는 근대 국가라는 자기서사(self-narrative)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1979년 이슬람 혁명은 이 자기서사를 근본적으로 붕괴시켰다. 존재론적 안보 관점에서 보자면 국가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단절되는 존재론적 단절(ontological rupture)의 순간을 경험했다. 이슬람 혁명은 정권교체를 넘어 국가로서의 이란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방식,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타자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국가 정체성 내러티브는 시아파 혁명 이데올로기,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 제3세계 연대 정치가 결합된 저항의 자기서사였다. 특히 시아파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카르발라 전투의 기억은 이 자기서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카르발라 전투는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강한 적에 맞서 정의를 위해 희생하는 저항의 서사로 재해석되었다. 이란 정권은 이를 현대 국제정치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국가 정체성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하지만 저항을 중심으로 구축된 이란의 국가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의 유연함이다. 이란이 말하는 저항은 물리적인 대결과 분쟁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외교와 협상이라는 언어로도 재구성될 수 있는 정체성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 개념으로 타끼야(taqiyya)와 마슬라하(maslaha)를 제시한다. 타키야는 의역하자면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시아파 공동체는 반복적인 박해 속에서 신앙과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나 입장을 일시적으로 감추는 것을 정당화해왔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타끼야 개념은 외교전략을 도출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해석되었다. 혁명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생존과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협상하거나 전술을 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이익'을 의미하는 마슬라하는 국가의 맥락에서 생존과 국가이익으로 재해석 되었다. 혁명을 지도한 루홀라 호메이니도 혁명 체제와 국가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보았고 필요하다면 일부 이념과 원칙도 국가 이익을 위해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두 개념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서구 패권에 대해 강한 적대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정책에서는 협상과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사상적 토대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저항 정체성의 유연함은 호메이니 사후 최고 지도자가 된 알리 하메네이 시기에 더욱 두드러졌다. 하메네이는 저항을 군사적 급진주의로 정의하지 않고 존엄, 지혜, 실용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앞서 살펴본 강경파와

개혁파의 경쟁 역시 바로 이 유연한 저항 정체성의 교리, 언어, 실천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은 유연한 저항 정체성이 정책 영역에서 잘 드러난 사례 중 하나이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이란을 집권한 세예드 모하마드 하타미 정부는 서방과의 긴장 완화와 국제사회와의 관계 재조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을 일시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등 제한적 양보를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하려 했다. 반면 하타미 이후 대통령이 된 아흐마디네자드 시기 핵 프로그램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저항의 상징으로 재구성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라늄 농축 재개와 IAEA 추가의정서 이행 중단이 정당화되었다. 2013년 대통령이 된 개혁파 하산 로하니는 아흐마디네자드와는 또 다른 행보를 보였다. 핵 협상을 추진하며 원심분리기의 바퀴뿐 아니라 경제와 국민의 삶의 바퀴도 함께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로하니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파의 재해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로하니 대통령 당시 핵 협상 노선이 혁명과 저항의 국가 정체성으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타협으로 정당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은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언급한 영웅적 유연성(Heroic Flexibility)이다. 2013년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하메네이는 외교에서 때로 전술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레슬링 선수는 때때로 기술적인 이유로 유연성을 보이지만 자신의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유연한 저항 논리는 하메네이 사후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전쟁 이후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양해각서와 현재 진행 중인 후속 협상 역시 새로운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 아래 추진되고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협정 내용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란의 국익과 저항 전선(Resistance Front)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미국과의 협상을 정당화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혁명 이후 형성된 유연한 저항 정체성이 특정 지도자나 엘리트 집단의 성향과 이들 간 경쟁을 넘어 이슬람공화국의 지속적인 통치 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란 국가 정체성과 아래로부터의 위협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협상이 보여주듯, 이란 강경파와 개혁파의 경쟁은 때때로 긴장과 불협화음을 동반한다. 하지만 이 경쟁은 어디까지나 혁명 체제 내에서의 갈등으로 국한된다. 두 세력 간 내부 경쟁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란 정치체제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이슬람공화국의 탄력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정치적 효과를 수반했다. 반면 이란 사회 곳곳에서 누적되어 온 시민들의 저항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었다. 최근 목격한 이란 사회운동은 혁명 질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혁명 이후 국가가 구축해 온 저항의 자기서사와 국가권력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엘리트 경쟁이 혁명 체제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내부 논쟁이었다면, 이란 시위는 우리가 왜 여전히 이 체제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란 시위에 대한 많은 연구는 2022년의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을 이란 정권 정당성 위기의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2022년 봉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사회적 불만과 저항이 응축되어 폭발한 결과였다. 이 흐름의 중요한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2009년 '녹색운동'이다.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을 계기로 촉발된 이 운동은 도시 중산층, 대학생,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이 요구한 것은 체제 전복이

아닌 책임정치와 투명성,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체제 내부의 개혁이었다. 그럼에도 녹색운동은 이란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공개적으로 국가 권위에 도전했고 이를 통해 이슬람공화국을 대중 권력에 노출시켰기 때문이다.

국가의 강경 진압은 시위를 억누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회 내부에 축적된 불만까지 제거하지는 못했다. 약 10년 뒤 등장한 이른바 '데이(Dey) 시위'는 녹색운동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 기반이었다. 도시 중산층이 아니라 노동자, 실업 청년, 농민, 여성들이 거리의 주축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집단은 이란 사회운동 연구자들이 '빈곤한 중산층(middle-class poor)'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사회계층이었다. 교육 수준이 높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가 보장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전국 곳곳의 다양한 사회집단이 각자의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는 임금 체불에 항의했고, 농민은 물 부족과 가뭄에 분노했으며, 청년들은 실업과 암울한 미래를 문제 삼았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들의 요구는 다양했지만 이란 체제가 약속했던 삶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공유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이 시기부터 강경파뿐 아니라 개혁파를 향한 비판도 등장했다. 체제 내부 개혁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2019년 대규모 시위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이렇게 수년간 축적된 불만과 좌절이 폭발한 결과가 바로 2022년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이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시작된 튀니지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미 사회 곳곳에 쌓여 있던 마른 장작에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은 불씨가 되었다. 강압적인 히잡 규정과 도덕경찰에 대한 분노에서 촉발된 시위는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도시 중산층, 학생, 교사, 노동자, 상인뿐 아니라 다양한 소수민족 집단까지 참여했다. 혁명 이후 처음으로 계급, 젠더, 민족,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연합체가 등장했고 공개적으로 정권 교체를 요구했다. 거리로 나온 많은 시민들에게 개혁파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니었다. 개혁파는 수십 년간 점진적 변화를 약속해 왔지만 실제로는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강경파와 개혁파 정치 엘리트의 경쟁이 이란 정권의 저항정체성 유지에 기여한 반면,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이란 체제의 존재론적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하여금 외부의 개입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다.

나가며

미국 공습에 대한 이란의 강경 대응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많은 분석은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이란 강경파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하지만 전술했듯, 이란은 단순한 일인 권력체제가 아니다. 강경파와 개혁파, 실용주의자와 원칙주의자 사이의 경쟁과 견제가 내재되어 있는 정치체제다. 트럼프 대통령도 4월 초 미국과 이란의 협상 시도가 교착상태에 빠진 배경으로 이란 엘리트 내부의 분열을 언급했다. 워싱턴의 많은 정책결정자 역시 이란 내부의 파벌 경쟁과 사회적 불만을 체제 붕괴 가능성의 신호로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란 내부의 갈등은 분명 존재했다. 개혁파와 강경파는 핵협상과 대외관계, 경제정책을 놓고 끊임없이 충돌했다. 전쟁 직전 대규모 시위가 보여주었듯 사회적 불만과 반정부 저항도 상당했다. 하지만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등장하자 그동안 분열돼 있던 정치 엘리트와 국가기관은 다시 하나의 저항 서사 아래 결집할 수 있었다. 전쟁이라는 실존적 위협과 안보 불안 속에서 인간 안보에 대한 요구는 점차 잊혀졌다.

요컨대, 미국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존재론적 안보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이미 경험했듯, 미국의 개입은 자유와 발전을 요구하는 이란 사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 대신 국가 주권과 외세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란 정치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저항 서사를 실증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란 체제를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고자 했던 미국이 오히려 그 체제를 강화시켰다는 것이 이 전쟁이 남긴 가장 큰 역설이 아닌가 싶다.

필자 소개 한새롬(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새롬은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 중이다. 국제정치를 전공했으며 중동(MENA)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안보,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Unemployment and Resistance in Tunisia: The Democracy-Security Nexus”(2025), 대표 논문은 “Performing (against) the State” (2025), “Transitional Justice for Whom?” (2022), “Securitization of the Unemployed and Counter-Conductive Resistance in Tunisia” (2021) 등이 있다.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el: 031-5176-2332 | FAX: 031-624-4751 | Email: tongil@snu.ac.kr